
－ 2021 금융위원회
「금융산업국」 업무계획 －

- 코로나19 극복과 금융안정 최우선
 - 금융산업의 혁신과 국민체감 정책 추진
-

2021. 2. 4.



금융위원회
금융산업국

목 차

I. 코로나19 대응 및 금융산업 리스크관리 강화	1
1. 코로나19 지원대책 연착륙 방안 마련	1
2. 제2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	2
3. 新 국제회계기준(IFRS 17) 도입·시행 대비	3
II. 지역·서민금융 자금중개기능 제고	4
1. 지역금융 자금중개기능 제고	4
2. 금융권 지점합리화 제고	5
3. 중금리 대출상품 활성화 등 금융부담 경감	6
III.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	8
1.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	8
2. 금융상품 가격체계 합리화	9
3. 금융회사 건전경영 확립	10
4. 보험의 「사적 안전망」 기능 강화	11
5. 보험업의 금융소비자 편의성 및 신뢰제고	12
IV.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	14
1. 디지털금융 촉진 위한 금융·ICT 융합 확대	14
2. 금융회사·디지털 금융간 합종연횡 촉진 제도개선 ·	15
3. 비대면 금융서비스 확대	16
4. 보험업 플랫폼 규율 강화	17

※ 국민체감형 금융정책 발굴·추진

I. 코로나19 대응 및 금융산업 리스크관리 강화

◆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금융조치 연착륙 추진

◆ 건전경영을 위한 금융업의 리스크관리 강화

1] 코로나19 지원대책 연착륙 방안 마련

1] (만기연장 등)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행중*인 소금융권 만기 연장·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방안 마련·발표(~2월말)

* 신청기한을 당초 '20.9.30일 → '21.3.31일까지로 한차례 연장

** 대출 만기연장 116조원, 원금상환유예 8.5조원, 이자상환유예 0.15조원

○ 방역상황, 실물경제 동향,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 조치 연장이 불가피

- 금융권, 중소기업·소상공인 등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 방안 발표 예정

○ 유예 조치의 정상화시에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금융권의 연착륙 지원방안 마련 병행

- 상환유예 종료 이후 개별 차주의 상황에 따라 차주가 상환가능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기·분할 상환* 유도

* 유예 원리금의 상환기간 연장, 장기대출 전환 등

○ 만기연장·상환유예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애로를 겪는 차주에 대해, 정책금융기관의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*을 가동하고, 대환대출 등 금융권 자체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

* 기업은행(금리인하 지원 등, 1조원), 산은(대출·투자, 1조원), 신보 보증 등

2] (규제유연화)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*중인 금융규제 완화조치 역시 경제여건 등 감안하여 연장방안 등 검토

* LCR규제 완화('21.3월말까지), 예대율 규제 유예('21.6월말까지) 등

○ 코로나19 상황 개선에 따른 정상화 추진 시에도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기간 부여

③ (손실여력 확충) 만기연장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건전 경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충당금적립 등 자본충실을 적극 추진

- 불확실성 해소 시까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적정 배당 등을 투명*하게 권고

* 은행(지주)의 경우 이익의 20%이내에서 배당 원칙('21.6월말까지)

② 제2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

① (여전사) 유동성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도입·시행

- 「유동성 리스크 관리 모범기준*」을 여전사에 도입하고('21.1분기~), 금감원이 주기적으로 유동성을 평가('21.4분기~)

* (주요내용) ①유동성 측정지표의 개편, ②유동성 관련 공시항목 추가 등

- 카드사(8배)에 비해 다소 완화 적용(10배) 중인 할부금융업자 등에 대한 레버리지(자산/자본) 비율을 카드사와 동일수준으로 조정

- 카드사 조정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자산별 위험가중치* 차등화

* (예) 현금서비스에 대하여 자동차 할부 대비 높은 위험가중치 부여

② (저축은행) 선제적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완충자본 제도 도입

- 위기상황에서 적기시정조치 기준 이상의 BIS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충자본*(+2%p) 도입

* 자산 1조원 이상 자본비율 8% → 10%, 자산 1조원 미만 자본비율 7% → 9%

- 완충자본 미달 시 이익배당 제한 및 자본확충 계획 수립·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지도근거 마련

③ (상호금융) 거액여신 업종*에 대한 여신관리 강화('21.3월)

* 동일인 여신한도만 적용 ⇒ 거액여신한도, 업종별 여신한도는 未적용 중

- (거액여신) 자기자본의 10%를 초과하는 여신(거액여신)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

- (업종관리) 부동산업·건설업종에 대한 여신취급 한도는 각각 전체 대출(어음포함)의 30% 이내로, 두 업종 합계액도 50% 이내로 제한

③ 新 국제회계기준(IFRS 17) 도입·시행 대비

① (영향분석) 새로운 국제회계기준(IFRS 17) 및 재무건전성 기준(K-ICS)의 도입('23년)에 따른 영향 파악을 위해 보험사 대상 영향분석('21년중)

< 참고 >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(IFRS 17) 개요

- (개요) 국제회계기준위원회(IASB)가 보험계약 회계처리의 투명성·일관성 확보를 위해 제정한 기준으로 130개국 중 105개국이 IFRS를 적용중
- (주요내용) 판매시점이 아닌 현재시점의 금리·해지율 등을 기준으로 보험부채를 재평가(시가평가)하고, 보험료를 보험 보장기간 전체에 걸쳐 나누어 인식(발생주의)

- 자산·부채, 손익,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효과를 정기적으로 점검*하고, 보험회사가 선제적으로 관련 지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

* ('19년말 재무제표 기준 영향분석) '20년 하반기 분석실시 → '21년 1/4분기 결과점검
('20년말 재무제표 기준 영향분석) '21년 하반기 분석실시 → '22년 1/4분기 결과점검

② (대응여력 확충) 새로운 재무건전성 기준(K-ICS)을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적용방안을 마련하고, 보험회사 자본확충 수단 확대

- (로드맵) 국제권고 기준인 新지급여력제도(K-ICS)를 '2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* 마련('21.上)

* '23년부터 지급여력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일정기간 후 국제권고 100%수준 달성

- (자본확충) 보험회사 자본확충을 위해 '조건부자본증권*' 발행을 허용하고, 부채조정수단 활성화 방안** 검토('21년중)

* 특정 사건 발생시 상각(소멸) 또는 보통주로 전환되는 사채로 은행은 발행 가능

** (공동재보험) 현재 허용되나 추가 개선사항 검토 / (부분 계약이전) 허용여부 검토

③ (법령정비) '23년 IFRS 17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전 회계기준에 따라 제정된 현행 보험업법령을 IFRS 17에 맞추어 재정비

- 금융위·금감원·업계·민간전문가 등으로 「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」을 구성하여 정비 필요사항 발굴('21.上) 및 법령개정* 추진('21.下)

* (주요내용 예시) 보험부채 시가평가, 발생주의 기반의 수익·비용 인식 등을 반영하여 정의를 새롭게 하거나, 보험회사 감독관련 세부기준 조정·변경

Ⅱ. 지역·서민금융 자금중개 기능 제고

- ◆ 저축은행 등 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지역사회 필요 유동성 공급
- ◆ 지점합리화, 중금리대출 등을 통해 소비자의 금융 접근권 제고

① 지역금융 자금중개기능 강화

- ① (지방은행) 지방은행의 지역 자금공급 역량 확충을 위해 시중은행과 차별(완화)화된* 경영실태평가 및 리스크평가 방안 마련·적용('22년~)

* (예시) D-SIB과 Non D-SIB을 구분하여 동일한 자기자본비율이라도 등급을 달리 부여

- ② (상호금융) 신협·농협의 지역 협력 및 유대를 통한 지역금융으로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사회·경제조직 상호 협력방안 추진(法 개정*과 연계)

* 전재수 의원('19.7.15 발의) 「신용협동조합법」 개정안이 정무위에 계류 중

- 중앙회승인에 따라 교육·복지사업 경제조직에 자기자본의 20% 이내 출자 허용

- 신협중앙회에 「사회적 경제지원 기금」 설치 근거 마련 등

- ③ (저축은행) 지역금융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축은행간 M&A를 허용하여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한 자금중개기능 효율화('21.上)

- 비(非) 서울지역 저축은행간에는 건전경영, 법규준수 등 요건* 충족 시 영업구역이 2개까지 확대되는 합병 허용

* 합병 전·후 기준 규제비율 이상의 BIS비율 달성, 최근 3년간 제재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

- 被합병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에 대한 의무 여신비율 등 적용*으로 해당 지역 자금공급 위축을 방지

* (예) 被합병 지역 의무여신 = (Max [합병 시점 총여신의 40%, 해당 지역 수신의 90%])

② 금융권 지점합리화 도모

□ 비대면·디지털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권의 생존 전략과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 제고 간의 균형 있는 발전 모색

- 금융위, 금감원, 금융업협회, 은행, 상호금융 등이 참여하는 「금융권 지점합리화 TF」(20.11월~)를 통해 방안마련 추진

□ (주요내용) 지역금융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및 업무위탁을 통한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, 지역금융 우수 금융회사에 인센티브 제공

① (지점 폐쇄 절차 개선) 폐쇄결정 이전에 영향평가를 실시*하도록 유도하고, 신설·폐쇄 정보를 매년 공시토록 추진('21.1분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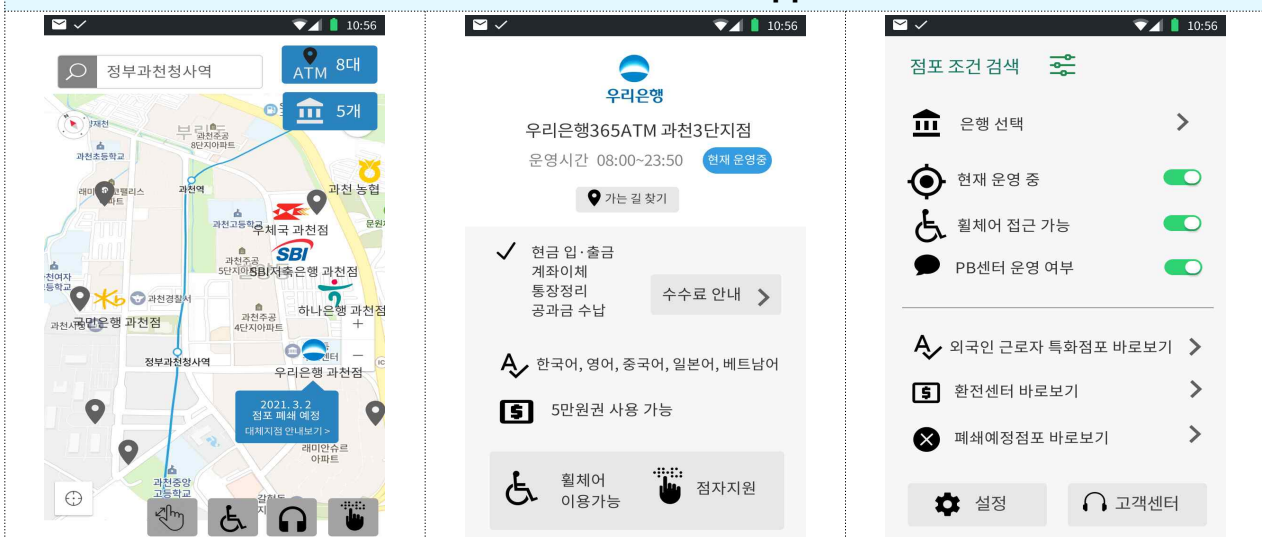
* 현행 은행권 공동절차가 불명확하여 일부 은행은 폐쇄 결정 이후 형식적으로 평가

② (금융권 지점 App개발) 은행, 상호금융 등 금융회사의 점포 위치 및 서비스 제공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凡금융권 App 출시(가칭 「금융대동여지도」)('21.下, 금융결제원)

* 점포, ATM기 위치, 운영시간, 폐쇄예정 점포 및 대체점포, 수수료 등 다양한 금융정보 제공

-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, 신협 등 제2금융권도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금융정보망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축
- 앞으로 지역별 고령인구 대비 분포도 등으로 확대하여 디지털 소외 지역·계층 대상 정책참고로 활용

< 참고 > 「금융대동여지도」 App 구동현황



- ③ (업무위탁 범위 확대) 우체국이 금융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 취급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*하여 지점 폐쇄시 우체국 활용 가능성 제고

* (예) 특정지역 은행점포 폐쇄시 우체국에 업무 위탁

- ④ (인센티브 제공) 은행에 대한 「지역재투자 평가」 시 지역사회 금융 인프라 구축 현황*을 반영하고, 결과를 기반으로 인센티브** 제공

* (예) 지역별 인구 대비 점포수(배점 5점), 점포 신설시 가점(0.2점)

** 지자체 금고 선정시 우대, 경영실태평가 반영 등 인센티브 제공

③ 중금리 대출상품 활성화 등 금융부담 경감

- ① (중금리 대출 활성화)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(24% → 20%)되는 만큼, 금융업권의 중금리(가중평균, 최고금리)도 인하·조정 유도(‘21.3월~)

- 거래이력이 부족한 중·저신용자(Thin Filer)의 금융접근권 제고를 위해 저축은행의 대안신용평가 모델 활성화 등 금리산정 합리성 제고
- 금리인하에 따라 중·저신용자 대출이 감소되지 않도록 중금리대출 취급이 많은 저축은행에 추가 인센티브(예: 예대율 추가) 부여
- 인터넷전문은행이 법과 도입취지에 부합하게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혁신적으로 확대 공급해나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* 강화

* 중저신용자 대출 계획 및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·개선 등

- 비대면+One-stop으로 보다 낮은 금리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* 구축(‘21.10월~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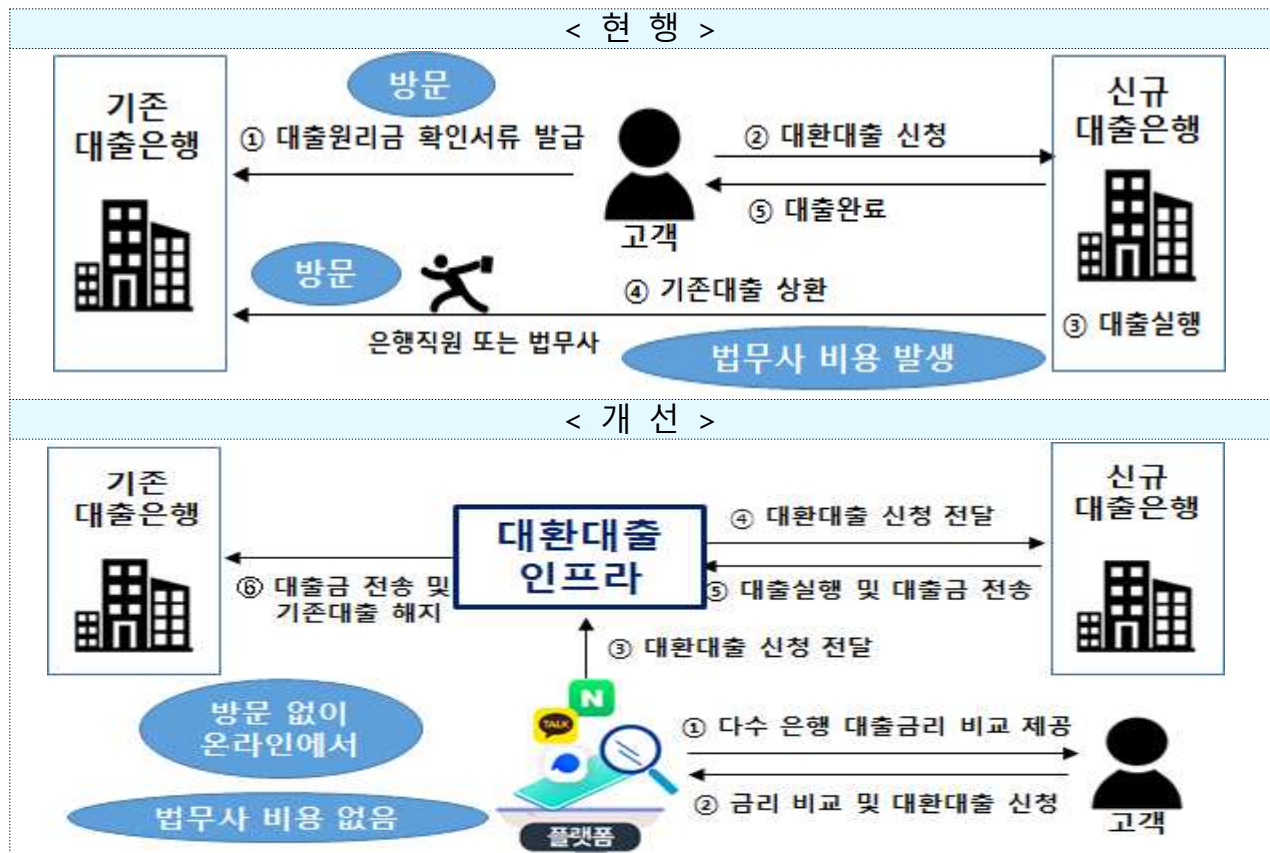
* 계좌통합관리시스템(어카운트 인포)과 같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여러 금융기관간 대출상품 이동을 중개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

- (핀테크 App) 고객이 보유한 기존대출 정보와 전환 가능한 다른 금융회사의 모든 대출상품 금리정보를 App상에서 제공
- (소비자)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정보 등을 비교한 후에 가장 유리한 조건의 대출상품을 선택하여 대환대출 요청
- (신규 은행) 고객의 요청에 따라 플랫폼을 통해 기존대출을 상환(기존 은행에 대출금 전송) 하고 보다 유리한 조건의 신규대출 실행

⇒ 금융소비자가 ①보다 낮은 금리 대출*로, ②보다 낮은 비용**으로,
 ③영업점 방문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
 (경쟁을 통한 금리인하 유도, 소비자 편의 제고 및 핀테크 활성화)

* 경쟁 및 대출모집인 비용 절감(기존 대출모집인 수수료 3~4%, 플랫폼 1%대) 효과

** 법무사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환대출 과정에서 드는 비용도 낮아지는 효과



② (금리인하 요구권 내실화) 실태조사 등에 기초하여 금리인하 요구권
 공시·홍보·제도개선 등을 추진(금융당국·금융권 TF운영, '21.3월~)

- 금리인하 요구권 실태공시 및 홍보 강화로 소비자 인지·활용도를
 제고하고,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우수사례 발굴·확산 유도
- 상호금융업권에도 금리인하요구권 도입(신협법 개정, '21.12월)

③ (디지털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) 도서, 영상 등 콘텐츠 구독경제
 가입·해지를 편리하게 하여 금융소비자 보호

- 소비자가 ①유료전환 일정을 미리 알고, ②이용한 만큼만 부담,
 ③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카드결제 제도 개선('21.5월~)

Ⅲ.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

- ◆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진단하고 인가·업무 범위 확대하는 한편,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
- ◆ 혁신적인 금융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·규제 개선

①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

- (경쟁도평가) 금융산업의 여건, 현황을 진단하고 금융규제·감독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「제2次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」 실시
 - 제1차 평가('18~'19년)시 포함되지 않았던 신용평가업 포함('21.上)
 - 새로운 결제수단과 빅테크·핀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신용카드, 은행업 등 전통업권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도를 평가('21.下)
- (진입규제) 변화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 합리화 추진
 - ① (소액단기 보험) 소액·단기 특화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'소액단기 보험회사' 제도 시행('21.6월~)
 - 일반 보험회사에 비해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(300억원→20억원)
 - 소액·단기에 부합하지 않는 高자본(원자력, 자동차 등), 長期보장(연금·간병) 종목을 제외하고 모든 보험종목 취급을 허용
 - ② (진입정책 유연화) 보험사가 환경·제도변화*에 맞춰 경영효율화 등을 탄력적으로 추진하도록 새로운 보험업 허가정책 마련('21.7월~)
 - * (1) IFRS17('23년), 저금리 등 보험환경 변화에 따라 경영전략 및 사업구조 개편 예상
 - (2) 소액단기전문보험업 등 인가단위 변경에 따라 다양한 신규사업자 진입 예상
 - '21년 상반기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, 현행 1사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하는 세부기준 마련
- ③ (겸영사업자 완화) 금융회사가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 「여전법」상 인가요건(대주주, 재무 등)은 완화·심사('21.上)

② 금융상품 가격체계 합리화

① (신용평가 개선) 합리적인 금리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저축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(CSS) 고도화 추진

- (대형 저축은행) 자체 CSS모형 고도화를 위한 관리체계 및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가이드라인 마련
- (중소형 저축은행) 공동 이용중인 저축은행 중앙회의 '표준' CSS모형에 대한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 및 모형 개선 병행

② (저축은행 금리산정 합리화) 대출금리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「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*」 개정을 추진

* '14.9. 제정, 중앙회 자율규제(업무방법서, 내규에 반영)

※ 은행 '12.11.제정('19.3.개정), 상호금융 '13.11월 제정

- 업무원가 등 대출금리 원가 요소별로 현행 산정체계의 문제점*을 검토하여, 합리적인 개선안 마련

* (예) 모집인 채널에서 발생한 비용(모집인수수료)이 비모집인 채널(예>모바일) 이용 고객에도 전가

③ (가맹점수수료 개편) '21년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체계 개편을 통해 수수료를 합리화하고, 영세 소상공인 부담 경감(~'21.11월)

- 카드사, 가맹점단체, 회계법인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「카드수수료 협의회*」를 구성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

* 관계부처, 금감원, 회계법인, 여신협회, 카드사, 가맹점단체, 법률전문가 등

- 회계법인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적격비용 산출을 바탕으로, 우대수수료율 수준, 특수가맹점 인정 범위 등 검토

* (참고)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한('20.12.29일 여전법 시행령 개정) 등에 따른 마케팅비용률 차감 등 현안 반영

③ 금융회사 건전경영 확립

- ① (저축은행) 부적격자가 저축은행을 우회지배*하는 방식 등으로
私금고화하고 불건전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('21.上)

* (예) 저축은행의 대주주 법인(母회사)의 주식 취득 등

-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대주주 수시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고,
금융위 승인없이 경영권이 변경된 경우 등* 필요시 '즉시 심사'

* (예) ①최대출자자 또는 사실상 지배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, ②심사대상과 저축은행간
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등 금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(지배구조법 참고)

- 자금력이 없는 LP가 차입자금으로 출자하여 저축은행을 인수하지
못하도록 PEF의 주식취득승인 요건*을 일부 강화

* (현행) PEF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'차입자금이 아닐 것' 요건 未적용

→ (개선) 심사대상 LP 및 GP의 PEF에 대한 출자금이 '차입자금이 아닐 것' 요건 부과

- ② (여전사) 여전업 진입요건을 금융투자업* 등 타업권을 참고하여
정비함으로써 적격 사업자 진입 유도('21.12월~)

* (예) 「자본시장법」상 투자자문업·투자일임업 등록시 대주주의 재무요건 및 사회적 신용,
투자업무 관련 전문인력(투자권유인력·투자운용인력 등) 등을 요구

- 대주주요건(非카드), 인적·물적요건 등*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

* (예) 캐피탈의 경우 대주주요건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, 인적·물적요건 등 미비

- ③ (보험사) 단기실적주의를 개선하고 장기리스크 관리, ESG* 경영을
강화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**(RAAS), 경영진 성과·보수체계 개선('21.下)

* 환경(Environment)·사회(Social)·지배구조(Governance) 등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지표

** Risk Analysis and Application System(경영실태평가시스템): 보험사의 각종 위험
노출정도, 위험관리 및 통제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감독수단과 연계

- (성과보수 체계개선) 성과평가지 장기지표 활용 제고, 성과보수 이연
기간 확대 등 장기실적에 기반한 인센티브 지급 강화

- (경영실태평가 개선)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에 신재생에너지사업
투자 반영 등 ESG 경영·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

④ 보험의 「사적 안전망」 기능 강화

- ① (4세대 실손 도입) 실손보험의 수익자 부담 원칙 확보,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「4세대 실손의료보험」 출시('21.7월)
 - (상품구조) 포괄적 보장에서 급여(主계약)와 비급여(특약)를 분리하고, 의료이용과 연계한 비급여 보험료 차등화 추진
 - (자기부담) 급여 10% → 20%, 비급여 20% → 30%로 각각 10%p씩 상향하여, 실손보험료 인하 및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
 - (재가입 주기) 재가입 주기를 15년 → 5년으로 단축하여 국민건강보험(公보험)과의 연계성 강화
- ② (사적안전망 강화) 고령화, 4차산업 혁명, 재해 등 사회구조적 위험에 대한 보험산업 역할 제고를 위해 「보험산업 사적안전망 강화 T/F」 운영

< 참고 > 「보험산업 사적안전망 강화 T/F」 운영계획(안)

- ① (분과1 : 고령화 지원) 개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연금, 고령층 특화 보장성 보험*, 건강데이터를 활용한 만성질환자 전용 보험 등을 개발 활성화

* (예) 60세 이상 고령층에 특화된 보장성 보험 활성화, 고령자 연금 증액 및 저연령자 연금 가입 유도 등을 통한 연금보험 활성화

- ② (분과2 : 필수노동자 보호) 대리기사·배달종사자 등 플랫폼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, 시스템 구축, 상품 활성화 등 검토*

* (대리기사) 복수의 단체보험에 중복가입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 구축, 단체보험보다 저렴한 개인보험 상품 출시 등 추진

* (배달종사자) 배달중에만 보험료를 책정·부과하는 On-Off 보험 활성화(예: 배민-KB손보)

- ③ (분과3 : 중소기업·소상공인 보호) 자연재해·전염병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피해(휴업손해, 계약취소 등)를 지원하기 위한 보험상품 개발 추진

* 전염병(코로나 19 등) 등 발생빈도가 낮지만 피해가 큰 보험사고에 대한 위험평가모델 등을 구축하여 적정 보험료 산출 및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노력

- ③ (자동차보험 개선)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료인상 문제* 해결을 위해 선진사례**를 참고하여 치료·보상기준 마련('21.上)

* 연간 과잉진료 누수 보험금 규모는 약 5,400억원 수준 ⇒ 1인당 계약자 부담 약 2.3만원

** (영국) '18년 「민사책임법」 개정을 통해 모든 whiplash(목등어깨) 부상에 대해 의료기관 진단서 발급을 의무화하고, 진단서에 따라 치료기간을 한정

- ④ (헬스케어 활성화) 보험의 역할이 “위험보장(cure)”에 그치지 않고 “선제적 위험·건강관리(care)”로 확대되도록 헬스케어 활성화 추진('21.上)

- '21.2월중, 보험업계, 헬스케어 산업계, 학계,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「보험권 헬스케어 활성화 T/F」 신설
- 건강관리기기, 건강데이터 활용 확대 등 다양한 상품출시·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, 헬스케어와 연계된 상품은 혁신서비스 적극 지정

⑤ 보험업의 금융소비자 편의성 및 신뢰제고

- ① (실손청구 전산화) 약 3,800만명 실손 가입자의 청구불편 해소 등을 위해 의료비 증빙서류의 전자적 전송 등을 통한 청구전산화 추진*

* 청구전산화를 의무화하는 보험업법 개정(안) 입법 노력 지속 추진

- ② (손해사정 개선) 손해사정이 보험회사와 소비자간 이해관계를 균형적으로 반영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('21.3월)

- (절차·기준 표준화) 손해사정 업무의 객관성·공정성 확보를 위해 손해사정업무의 표준화된 절차·기준을 법규에 명문화
- (위탁통제 강화) 위탁 손해사정업자의 선정·평가기준 등을 내부 통제에 반영하고, 자회사 위탁 편중 방지를 위한 절차* 강화

* (예) 손해사정 위탁건수의 50% 이상을 자회사에 위탁하는 경우, 선정기준·평가 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공시하는 방안 등

- (불공정 행위 방지) 보험회사·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 업무 관련 절차·기준 위반 및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금전제재(과태료) 확대
- (의료자문 개선) 의료자문을 악용한 보험금 삭감을 차단하기 위해 내부 의료자문족 설치를 의무화하고, 제3의료기관 자문* 활성화

* 의료 관련 보험금 분쟁시, 보험사 비용으로 제3기관(대형병원 등)에 의료자문을 받는 제도

③ (불완전판매 차단) 보험 모집질서 개선을 위해 독립보험대리점 (GA) 판매책임 강화('21.上)

- (모집수수료) 과도한 모집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을 위한 1,200%를* 규제를 안착('21.1.1일 시행)시켜, 불건전 영업 유인 억제

* 계약 1차년도 모집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,200% 이내로 제한

- (내부통제 강화) 불완전판매 축소 등 자발적 개선노력 유도를 위해 「GA 내부통제 평가제도」를 도입하고, 우수 GA에 대한 인센티브* 마련

* (검토가능 예) GA에 대한 검사주기 연장, 검사유예, 제재수준 감경 등

- (감독·제재 정비) GA 제재회피 차단을 위해 검사·제재 시스템을 정비*하고, 선량한 설계사의 피해**를 막기 위해 “영업정지 대체 과징금” 도입

* (예) ① 위법행위가 절박된 GA가 제재회피 목적으로 계약을 이관하는 것을 원칙적 제한
② 기관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非활동·無실적 GA를 주기적으로 정비
③ GA 임원 등에 대한 “상당통보 제도” 도입 검토

** (예) GA의 일부 임직원 및 설계사의 위법행위로 인해 GA가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, GA 소속의 선량한 보험설계사의 영업기회까지 제한되는 부작용을 완화

④ (보험사기 근절)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보험사기 적발·처벌 강화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('21.上)

- (정보공유 확대)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간 정보 교류를 확대 하고, 신정원·금감원 등의 보험사기 적발시스템을 고도화

- (처벌강화) 보험업 관련 종사자(보험업계 종사자, 의료인,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등)의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

⑤ (외화보험 개선) 판매규모가 급격히 증가중인 외화보험의 환리스크,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('21.上)

- (검사·제재강화) 외화보험 판매사 대상 현장검사 등을 실시하여 중요사항 설명의무 누락여부 등 점검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엄중제재('21.3월~)

- (제도개선) 「외화보험상품 개발·판매 모범규준*」 제정, 핵심설명서 개정 등 소비자안내 강화

* (예) 신규상품 개발·판매시 상품위원회 심의·대표이사 승인, 외화 실수요 확인 절차 등

Ⅳ.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

- ◆ 그동안 핀테크, 빅테크의 성장과정에서 추진된 제도개선(완화)이 기존 금융업에 불리하다는 “기울어진 운동장” 논란 제기
 - 이에 따라 금융업권, ICT업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「금융규제 제도개선 방안」을 발표하고, 약 40건의 과제를 수용·추진 중
- ◆ 앞으로도 금융회사, 핀테크, 빅테크가 공정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현장소통에 기반하여 제도·규제개선 추진

① 디지털금융 촉진 위한 금융·ICT 융합 확대

- ① (소통의 場) 금융업권과 디지털금융 혁신·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지속 개최하여 상호 소통 및 제도개선의 장으로 활용
 - ② (샌드박스 활용) ‘금융규제 샌드박스’ 제도(‘19.4월)를 통해 제도 변경·시행 前에도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신속하게 금융업에 도입
 - 샌드박스를 통해 검증된 기술, 상품은 금융업에 도입될 수 있도록 금융관련 법령, 제도개선으로 연계
 - ③ (오픈뱅킹)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픈뱅킹 참여 대상에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을 포함
 - 오픈뱅킹 앱을 통해 카드대금 조화·결제 원스톱 이체, 증권계좌 연계를 통한 계좌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2금융권의 오픈뱅킹 참여 추진
 - ④ (보험 인프라) AI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의 보험권 공동 인프라를 강화하여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보험업 디지털화 촉진
 - AI 기반 자동차사고 수리비 산출시스템*을 고도화하고,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험사기예방시스템 개선(‘21.上~)
- * AI가 파손된 차량 사진을 분석하여 예상수리비 자동 산출하는 시스템(보험개발원)
→ 실제 차량수리비 청구액과 AI 손해사정이 유사하면 별도 조사 없이 즉시 보험금 지급

② 금융회사·디지털 금융간 합종연횡 촉진 제도개선

□ (new player 등장 촉진) 인터넷·ICT 기반 금융회사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고, 플랫폼 사업자의 일부 금융업 진출도 허용

○ 인터넷은행, 디지털 보험회사 등 비대면 기반 온라인 전문 금융회사의 금융시장 신규 진입*을 허용(~'21년말)

* 예비인가중인 토스뱅크 본인가 검토, 통신판매전문보험사·소액단기보험사 진입 검토

○ 보험회사의 플랫폼, 마이데이터, 헬스케어 등 新산업에 대한 투자·육성이 확대되도록 자회사 소유규제 정비('21.上)

○ 플랫폼 사업자(전금업자,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)의 보험대리점 등록 허용*을 검토하고, 환경변화에 부합하도록 진입요건** 개편

* 가이드라인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서비스가 "모집"에 해당될 경우, 플랫폼 사업자가 모집자격을 갖추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

** 보험대리점은 임직원의 10%를 보험설계사로 두도록 규제하고 있으나, 이는 전통적인 대면 설계사 영업을 염두에 둔 규제로서, 플랫폼 등에는 부적합

□ (업무범위 확장) 전통적인 금융회사가 디지털금융 연관산업 영위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금융·ICT간 시너지 효과 촉진

○ (플랫폼) 은행, 보험, 카드사 등 금융회사가 플랫폼을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*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 영위 허용

* (예) 금융회사가 음식주문, 부동산서비스 등 금융·생활 플랫폼 운영

○ (지급결제) 카드사의 MyPayment·종합지급결제업에의 진출 허용

○ (보험업무 위탁) AI·빅데이터를 활용한 보험료 산출 등 디지털 혁신 촉진을 위해 보험업의 본질* 업무를 Tech 기업에 위탁 허용 검토

* 언더라이팅, 손해사정, 보험금 지급 등

③ 비대면 금융서비스 확대

① (인증 활성화) 다양한 인증 방식을 제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혁신적인 상품 출시 유도

-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하여 새로운 기술이 인증 수단으로 금융권에 도입될 수 있도록 업계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
- 소비자가 은행 인증서로 은행 계열사 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든 사이트에서 인증할 수 있도록 은행의 인증 대행범위 확대



② (비대면·디지털 모집 활성화) 보험업의 비대면·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모집방식별 칸막이를 전제로 유지해 온 행위규제를 전면 재정비

- 대면 모집은 “비대면 방식”으로, 비대면 모집은 “디지털 방식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되, 소비자 보호장치 보완

< 참고 > 모집채널 선진화 T/F에서 허용을 검토중인 방안(예)

① 설계사 1회 이상 대면의무 면제(금융규제유연화 조치 상시화)

* 중요설명내용 녹취·보관, 보험사 녹취확인 등 일정한 안전장치 마련

② (전화 + 모바일) 전화로 **중요사항을 설명하고 녹취하되, 중요사항 확인 및 서명은 모바일(URL 등)로 하는 하이브리드 모집 허용**

③ (화상통화·챗봇) 소비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**화상통화·챗봇**을 통한 모집을 허용(⇒ 핵심금융서비스 지정과 함께 세부 운영기준 마련을 병행)

④ (AI 활용) 전화 모집시 **AI 음성봇이 TSS 기술***을 통해 **설명의무를 이행**할 수 있도록 허용(단, 설계사가 소비자 질의·추가설명 요구에 즉각 응대하는 경우만 가능)

* TTS(Text to Speech) : 표준상품설명대본(Text)을 인공지능(AI)이 음성으로 변환하여 계약자에게 설명하는 기술로서, 소비자가 속도, 강도를 조절할 수 있고 발음도 정확함

③ (찾아가는 서비스 확대) 상호금융업권을 중심으로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 대상 '찾아가는 서비스'인 태블릿 브랜치* 운영 확대

* 태블릿 브랜치(tablet branch): 전자펜으로 필기가 가능한 태블릿PC를 활용해 종이 대신 전자화면에서 고객정보 등록, 상품·서비스 신청서 작성, 신분증 스캔 등 제공

< 태블릿 브랜치 운영현황 >

구 분	신 협	농 협	수 협	산림조합
구축시기	'20.8월	'17.11월		
운영대수	214대	3,144대		
주요기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조합원 가입 ✓ 수신 신규 가입 ✓ 입출금 및 송금* ✓ 대출상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신규고객 등록 ✓ 수신, 여신 및 전자금융, 신용카드 가입(접수) 	未운영	未운영 (도입계획은 있으나 일정미정)

* 현금수납을 위한 별도 금고 휴대(파출수납)

④ 보험업 플랫폼 규율 강화

□ (플랫폼 규율체계) 상품비교 등 순기능은 강화하고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도록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

① (가이드라인) 보험서비스의 법적성격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모범기준*을 마련

* 법령, 판례, 해외 금융당국(日, 美, EU, 영국) 규율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, 보험료 비교, 플랫폼 보험청약, 보장분석 등의 법적성격 판단기준 마련

② (진입규제 개선) 모집행위를 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모집자격을 갖추고 디지털 금융혁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리점 진입요건* 완화

* 전금업자,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보험대리점 진입 제한 → 진입 허용
대리점은 임직원 10% 설계사 유지 → 규제 완화

③ (행위규율) 플랫폼과 기존 판매채널간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, 시장 지배력 남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규율체계 마련

* (예) 모집상품 범위, 영업방식, 수수료, 금지행위 등에 관한 종합 규율체계 마련